

제주도의 개발과 사회문화 변동*

이 상 철**

차 례

- I. 머리말
- II. 전통사회의 성격
- III. 개발의 전개
- IV. 사회변동의 성격
- V. 사회문화적 특성
- VI. 전망과 과제

I. 머리말

지난 1세기 동안 한국사회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변동을 겪었다. 한국의 한 부분인 제주도도 그러한 변화에서 예외일 수는 없었다. 이 변화는 주로 정치적 격변에 연유했다. 그러나 광복과 4·3을 거친 다음의 변화는 주로 경제적 변동에 기인한다. 6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사회의 개발은 제주도를 그 하위 고리의 하나로 연계시켜 진행되었다. 세계에서 최단기간에 이루어진 한국의 산업화는 제주도를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기본구조를 바꾸어 놓았다. 탈산업사회의 징후까지 부분적으로 보이는 지금은 이러한 변동의 성격과 의미를

* 이 글은 96년 10월 31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가 주최한 학술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유익한 토론을 해주신 참석자들에게 감사드린다.

**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정리하고, 미래를 전망할 적기이다.

한국의 경우 국가가 주도하고 자본이 동반자가 된 경제개발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했지만, 다른 한편 권위주의 정치·빈부격차·비합리적 사회 관행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제주도의 경우도 국가와 외지대자본이 개발을 주도함으로써, 소득과 생활편의 등은 증대하였지만 도민은 개발과정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90년대 들어 국가가 개발특별법 제정과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제주도 중심으로 하도록 전략을 변경한 것은 그동안의 개발정책에 대해 도민의 비판과 저항이 고조된 탓이다. 지자체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세계화 추세도 진행되는 현재는, 이러한 개발전략을 재고하여 도민을 주체로 세워야만 될 시점이다. 도민의 경우에도 농업 중심의 전통사회에서 배태된 사회문화적 제특성을 산업사회에 맞게 재창조할 뿐만 아니라 세계질서의 재편과 새로운 문명화 경향에도 적용할 수 있게 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의 개발이 초래한 제주도 사회변동의 성격을 산업화와 도시화·주변사회·사회운동의 세 측면으로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문화적 특성의 변화를 전통과 근대성을 중심으로 도출한 후, 그 연장선에서 미래에 대한 전망과 우리의 과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Ⅱ. 전통사회의 성격

산업화된 현재 제주사회의 모습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산업화 또는 근대화 이전 전통사회의 성격부터 고찰해야만 한다. 그 이유는 전통사회의 성격을 현재의 성격을 파악하는 비교준거로 삼아 무엇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밝히고, 과거와 현재의 성격 중에서 취할 것과 버릴 것을 골라내고, 미래를 전망하는 데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¹⁾

1) 일반적으로 전통사회는 근대화 또는 개발 이전 사회를 뭉뚱그려서 뜻하는 말이다. 이 글에서도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 60년대 이전 사회를 나타낸다. 그런데 60년대 이전 사회도 시대에 따라 여러 사회체제가 부침했기 때문에 전통사회라는 표현은 그 다양성을 포괄하지 못한 채 단순화시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 분석의 중심은 개발 이후의

한 사회의 성격을 형성하는 요인은 자연적 조건과 사회적 조건 둘로 대별할 수 있다. 제주도의 전통사회 성격을 규정짓는 데 기초가 된 자연적 환경은 도서성과 저생산성이란 두 가지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좁은 섬이라는 전자의 영향은 제주사회의 상대적 고립, 고유성의 유지, 사회관계 및 자원의 한정성으로 나타났다. 척박한 토지에 의한 저생산성의 영향은 힘든 삶의 조건과 평등사회 지향의 모습으로 드러났다. 평등사회란 잉여생산이 힘든 만큼 계급분화가 이루어지기 힘들었다는 말이다. 제주도가 사랑하는 삼무--도둑, 거지, 대문 세 가지가 없는 살기 좋은 공동체--의 전통은 잉여의 축적이 어렵기 때문에 모두가 열심히 일해야만 생존할 수 있었던 조건에 기인한 것이다. 조낭정신도 이것에 기초한다. 자연적 조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적 조건은 변방으로 특성화할 수 있다. 한반도 중심에서 격리되어 전국적인 중요성이 낮기 때문에 중심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수탈당하고, 격리되었기 때문에 외세-특히 왜구-에 마저 이중으로 수탈당한 역사는 제주가 고려의 직접 통치를 받은 이래 변방이었음을 뜻한다. 이러한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적응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주사람들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강하게 결속하는 사회적 전통을 형성해 왔다.²⁾

산업화 이전 제주도 경제는 농업에 기반을 두었다. 왜냐하면 섬이기 때문에 어업에 유리한 자연적 조건을 갖고 있었지만, 이에 반하는 사회적 요인도 여

사회이고 이 사회의 성격을 잘 드러내기 위해 그 이전 사회와 대별해서 비교한다는 점을 받아들인다면, 전통사회로 성격을 단순하게 규정짓는 것도 유용성이 있다. 이 경우 제주에서는 어느 시대가 전통사회의 전형을 보이는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동안은 제주에 관한 1세대 연구자들의 어린 시절인 30년대 전후를 막연하게 상징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글에서는 개발 이래의 산업사회와 대비하기 위해 전산업사회 또는 농업사회 일반을 상징하지만, 좀더 구체적으로는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연상해도 무방하리라 본다.

- 2) 이창기는 제주도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이러한 자연적·사회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사람들이 형성해온 도전·적용·초월 세 가지 기제로 설명한다(1995:403-407). 그는 이 기제들이 제주사람들의 의식구조와 생활태도뿐만 아니라 물질문화·관습·제도 등을 이해하는데도 유용한 설명틀이라고 생각한다. 제주도 가족제도에서 부계적(父系的) 원리와 비부계적 원리가 이원적(二元的)으로 공존하는 현상은 그 구체적 예라고 본다. 신행철도 환경적 조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제주도가 지연성이 강한 사회가 되고, 지연적 결속의 범위로 마을이 중요 단위가 되었다고 파악한다(1995:11-13).

렀 있었기 때문이다. 육지로 떠날 것을 염려해서 선박건조를 제한한 조선시대 정책, 왜구의 약탈을 피하기 위한 중산간 마을 선호, 유교의 영향으로 여성작업이 된 물질 등이 그것이다. 그래서 제주도는 어업사회보다 농업사회로서의 기본성격을 갖게 되었다.³⁾

Ⅲ. 개발의 전개

전통사회의 기본성격을 조건지웠던 자연적·사회적 환경들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회체제의 변화에 따라 역사적으로 상이한 영향을 제주사회에 미쳐왔다. 인간은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자연적 제약을 극복해 왔다. 제주에서도 개발에 따라 자연적 조건-도서성과 저생산성, 특히 도서성-의 한계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었다. 제주 자체가 가진 자연적인 내적 요인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대신에 한국사회의 영향, 즉 사회적인 외적 요인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농업 중심의 전통사회에서는 삶의 어려움으로 귀결되었던 조건들이, 개발 이래 한국자본주의가 확장되면서 국내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자원-아열대성 기후, 특이한 자연경관 및 상대적으로 잘 보전된 민속-을 이용하여 최고의 관광지를 만들고 상업적 농업을 위한 환금작물을 재배하는 기초가 되었다. 제주도는 자연환경의 요인과 정책결정자의 판단에 의해 한국사회에서 관광산업을 분업적으로 떠맡고 농업도 감귤 위주의 환금작물 생산에 주력하게 된 것이다. 식량작물을 주로 생산하던 자급자족적 농업사회에서 그 성격이 갑자기 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동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주도한 개발정책을 살펴보아야 한다.

제주의 산업화는 한국 산업화의 한 하위부문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의 산업화는 국가가 주도하는 개발독재 모델에 의했다. 국가가 주도했던 배경은 세계체제에서 한국의 위상, 국내 계급구조, 국가와 시민사회의 역학관계, 국가엘리

3) 농업사회의 성격은 제주의 마을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동안 마을은 중산간과 해안의 용수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전자에서는 반농반목(半農半牧)이, 후자에서는 반농반어(半農半漁)가 행해져 전체로 볼 때 농업이 기반이었다.

트의 정당성 획득의도 등이 결합된 것이다. 국가는 신국제분업체제 하에서 양질의 저임노동력을 기초로 하고 자본·시장·기술·원료는 해외에 의존하는 대외지향적 산업화전략을 추구했다. 이 과정에서 자본은 동반자로 창출·육성되고, 노동은 경제적으로 동원하되 정치적으로는 배제되었다. 이러한 개발논리는 지역개발과 국토의 공간적 분화에도 그대로 관철되었다. 지역개발은 지역간 균등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불균형성장론에 입각한 산업화전략의 하위부문으로서 이루어졌다. 동남부 해안지대와 수도권에 공단을 집중배치하고 기타 지역은 제외시킨 것처럼, 지역개발도 개발단지를 중심으로 특정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였다. 제주도의 개발도 이러한 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이 논리에 따라 추진되었다.

한국의 경제개발에 발맞추어 60년대부터 추진되었던 제주도 개발계획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국제자유지역, 관광개발, 산업개발이 그것이다. 국제자유지역계획은 63년 자유항설정구상을 시발로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제주 및 국내외 여건 때문에 계속 보류되었다. 관광개발은 제주도 개발을 주도해온 분야이다. 여기에는 박대통령 개인의 의지, 공업의 입지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대신 관광에서는 비교우위가 있는 제주도의 자연적·사회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을 보조하기 위해 제주도가 경주와 더불어 관광산업을 분업적으로 맡은 데 기인한다. 특히 국제관광지로서의 성격이 강조된 계획들은 관광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중시하고 있다(이상철, 1995a: 282-289). 경제성장에 의해 소득이 증대되어 여가에 대한 수요가 생기기 전인 60년대부터 관광을 고려했다는 것은, 제주관광이 애초에 국제시장을 겨냥했음을 뜻한다. 산업개발은 관광개발을 위한 보조적 성격을 띠고 있다. 요컨대 제주개발계획은 국가 주도하에 국제자유지역화를 염두에 두면서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기조 하의 제주도개발은, 국가가 주도하여 관광중심으로 개발을 해 온 80년대 말까지와, 특별법을 제정하여 개발전략을 전환한 그 이후 두 단계로 대별된다. 80년대 말 이전은 다시 관광개발을 위한 기반조성기, 국제관광

지화 추진기, 국민관광지로의 전환기,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개발 초기 60년대의 계획들은 제주도를 국제적 관광지로 성장시키기 위한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이 계획들에 따라 교통·도로·용수·동력·항만·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이 대폭 확충·정비되어 이후 개발의 토대를 형성하였다. 70년대의 개발은 청와대관광개발계획단에서 73년에 작성한 계획이 중심이 되었다. 이 계획에서 개발의 기본방향은 국제수준의 관광지를 조성하는 데 두고, 이를 위해 관광거점을 선정하여 중점투자를 함으로써 확산효과를 높이려 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와 독점자본이 중심이 되어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면서 관광개발을 본격화하였다. 80년대에 들어와 한국은 유신체제의 종결과 제5공화국의 등장, 경제개발 이래 최초의 마이너스 성장 등 큰 변화를 겪는다. 그래서 국가는 보다 많은 외자획득을 위해 제주도를 자유지역화할 것을 구상하였다. 그러나 개발여건이 불투명하고 투자재원도 부족하여 보류하였다. 대신 국민관광을 기반으로 하여 국제관광지로 개발하기로 방향을 조정하였다. 85년에 확정된 계획은 91년까지를 기간으로 하며 주요내용은 관광개발과 지역개발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은 개발정책에 의해 제주도의 사회구조는 급변하였고, 특히 산업구조는 육지와 다른 독특한 양상을 갖게 되었다.

제주도 산업기반의 변화를 보면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눈부시다. 도로포장률은 46년 0%에서, 60년 0%, 70년 14.0%, 80년 31.1%, 90년 58.1%로 증가했다. 자동차는 앞의 연도들에서 각각 113, 254, 1,340, 6,340, 37,257대이다. 전화가입은 백명당 0.08, 0.18, 1.44, 9.29, 26.1대로 증가하였다. 전화율(電化率)은 10.3%에서 10.4, 36.6, 99.9, 99.9%로 높아졌다. 1인 1일 급수량도 0.14리터에서 6.6, 84, 151, 235리터로 급증했다. 이 기간 동안 국도는 2.4배, 시군도는 207배, 제주항의 접안능력과 하역능력은 42배와 17.7배로 늘어났다. 기타 해상 및 항공 교통수단과 시설도 크게 발전하였다(제주도, 1993: 620).

개발 이후 산업구조는 농업 중심에서 관광산업 위주로 급변하였다. 산업별 지역총생산에서 1차산업의 비중은 61년 55.7%에서 71년 49.3, 81년 34.9, 90년 35.0%로 저하되어 왔다. 2차산업은 앞의 연도들에 각각 10.8, 8.0, 5.3, 3.0%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비해 관광산업이 포함된 3차산업은 33.5%에서 42.7, 59.8, 62.0%로 증가하였다. 지역의 산업별 취업자구성비에서도 1차산업은 67년 80.5%에서 71년 81.3%, 81년 71.8%, 90년 42.0%로 감소하였다. 2차산업은 해당 연도들에 1.7, 3.1, 3.1, 3.8%이다. 3차산업은 17.8, 15.6, 25.1, 54.2%로 증가하여 왔다(제주도, 1993: 622, 624). 전체적으로 보면 2차산업의 비중은 계속 낮고, 1차산업의 비중은 저하된 반면, 3차산업의 비중은 증가하여 왔다. 그러나 1차산업의 생산액은 총생산액의 1/3 수준이지만 취업자구성비에서는 아직도 과반수에 육박한다. 이러한 차이는 제주도민 상당수가 아직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되 소득은 평균이 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또 제주도가 아직 농업사회의 성격을 상당히 갖고 있음도 짐작하게 한다.

IV. 사회변동의 성격

산업기반과 산업구조의 변화에서 제주사회는 이제 산업사회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사회변동의 성격도 일차적으로 산업화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1, 3차산업이 중심을 이루고 2차산업의 비중은 극히 낮은데도 제주도에 산업화와 산업사회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을까? 산업화는 사용되는 에너지원과 에너지양의 변혁을 통한 경제발전, 특히 기술경제적 과정을 주로 가리킨다(Lauer, 1985: 369-423). 그렇게 보면 산업화와 산업사회가 반드시 2차산업만이 최대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산업화와 산업사회의 의미, 지표, 기준으로서 공업이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유일한 것은 아니다. 이 개념에는 공업생산이 중심이 되어 변화해온 사회경제구조와 생활양식 모두가 포함되는 것이다. 제주를 공업의 비중이 극히 작지만, 사용하는 에너지원과 양, 생활양식, 사회구조 등에서 산업화와 산업사회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회기반시설이 대폭 확충되었다. 사용되는 에너지는 석유·전기·가스가 압도적이다. 주민들의 생활양식도 상하수도·전기·전화·자동차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사회의 특징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은 산업화에 동반하여 도시화도 진행되어 왔다. 인구구성을 보면 시 부 거주자가 90년 현재 62.4%로서 군부의 두 배에 가깝다. 인구는 46년 26만 6천명에서 90년 51만 7천명으로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것은 육지 농촌과는 달리 제주도 총인구가 출생의 증가에 비례해 증가해온 것에 기인한다. 군부의 인구가 조금씩 줄고는 있으나 관광산업의 발달과 감귤산업의 성장으로 제주 자체에서 취업이 가능하므로 이도(離島) 비율이 육지 농촌에 비해 낮다. 관광객수가 60년 6,600명에서 90년 264만 3천명으로 급증하고, 감귤생산량이 60년 3,700톤에서 90년 74만 6천톤으로 증가한 것은 이를 반영한다. 반면에 개발에 따른 고급인력과 건설노동력 등의 수요는 증가하여 유입 인구도 상당수 된다. 도시화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양식도 달라지고 교육·문화수준도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아직 농촌인구가 1/3이 넘고, 농촌마을이 도시와 크게 격리되지 않아 가까이 생활권을 같이 유지하고 있으므로, 제주도 전체를 두고볼 땐 반농반도적(半農半都的) 성격이 강하다.

60년대 이래의 산업화는 자본주의적인 것이어서 제주도에겐 시장경제체제가 급속히 확대되었다. 자급자족적 농업은 육지시장을 겨냥한 상업적 농업으로 변하였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관광산업도 육지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제주경제는 한국경제의 경기상황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다. 한국자본주의에 감귤농업과 관광산업 중심으로 편입됨으로써 제주경제의 자율적 재생산구조는 해체되고 육지부의 재생산기제에 통합·종속된 것이다. 자본, 인적 자원, 특정품목의 유출입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도 그 때문이다. 예컨대 89-93년 5년간 자본유입은 5,890억원이지만 역외유출은 1조 5,523억원으로 유출이 유입의 2.6배나 된다(조선일보, 1995. 11. 24). 육지부에의 통합·종속은 2차산업의 성장도 더욱 어렵게 하여 제주경제발전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2차산업의 미비는 제주의 산업을 육지에 더욱 종속시키고, 취업 기회 확대도 불리하게 하며, 산업간 연관성 부족으로 관광산업의 성장에 따른 이익의 역외유출 비율도 높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장경제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본재부문은 일부에 한정되고, 여전히 소상품생산부문-농촌의 자영농

업과 도시의 자영상공업-의 비중이 높다. 이외에 관광산업을 육지부 대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은 관광산업의 비약적 성장에 따른 이익을 반드시 주민들에게 귀속시키지는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 관광 중심의 개발에 의해 제주도의 생활여건이 개선되고 경제성장이 이루어졌지만 성장의 효과가 주민의 소득증대로 100% 직결되지는 않고 있다.

산업화가 제주도에 경제성장·소득증대·생활편의 증대·교육문화수준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적지 않게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성격 때문에 부정적 영향 또한 많이 초래했다. 자립구조 와해·잉여유출·산업 및 지역 간 불균등발전·외지 독점대자본의 토지잠식·환경훼손·향락문화 유입·주민들의 박탈감 증대 등이 그것이다(이상철, 1995a: 303-306). 이 모든 결과는 기본적으로 국가와 외지 독점대자본이 개발의 주체가 되고, 제주도민은 개발의 입안·시행·이익의 향유에서 배제된 외생적 개발전략에 기인한다. 제주도의 산업화는 제주사회를 한국사회의 주변사회화하는 과정이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변동의 성격을 이차적으로 주변사회화로 규정하고자 한다. 다음의 특성들은 주변사회로서의 제주도를 반영한 것이다. ① 외적 규정성이 강하다. ② 중심과 불평등관계로 종속되어 있으면서 중심을 보완하고 있다. ③ 산업 및 부문간 연관성이 결여되고, 자본제적 생산관계의 발달이 지체되며, 그 결과 계급구성도 중심과 상이하다. 요컨대 개발에 의해, 한국사회가 세계체제의 주변부에서 반주변부로 이동하는 동안 제주도는 한국의 변방에서 주변사회로 성격이 변하였다.⁴⁾

4) '주변사회'란 세계체제론의 중심부-주변부 논리에서 원용한 것이다. 주변이란 세계체제론에서는 국가간에 적용하는 개념인데 일국 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현상황에서 불평등하거나 지배-종속적인 관계를 지칭하기에는 '내적 식민지'(internal colonialism)보다 나을 것이다. 또 '지방'이나 '지역'은 전국보다 작은 범위의 하위사회를 뜻하는 하지만 불평등관계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방을 주변사회라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제주와 다른 지방의 차이를 무시하고 중심, 즉 서울과의 대비만을 염두에 둔 것이 된다.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정치경제적으로 보아도 제주는 다른 지방과의 차별성이 뚜렷하다. 전국 각 지역의 성격을 나름대로 파악하고자 한다면 모든 지역을 하나로 묶뚱그리게 되어 지역간 특수성을 사상시켜서는 곤란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사회는 논란의 여지가 여전히 있으므로 더 바람직한 개념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설로 간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이상철, 1995a: 280-282).

도민을 소외시킨 채 1차산업에서 2차산업을 건너뛰어 3차산업이 중심을 이룬 제주도의 개발은, 제주를 주변사회화하는 한편 경제성장과 시민사회의 형성도 가능하게 하여 민주화의 기초로도 작용했다. 즉 사회변동의 삼차적 성격을 시민사회의 형성과 사회운동의 성장에서 찾을 수 있다. 제주에서는 4·3의 상처가 워낙 깊어 그후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저항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그러나 87년 민주항쟁과 6.29선언 이후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의 역학관계가 변함으로써 국가는 물리적·강압적 수단에 크게 의존하던 기왕의 정책들을 완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주도에서는 국가위상의 상대적 저하 외에, 도민들의 비판의식과 사회운동의 증가가 개발전략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경제성장은 도민들을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켰다. 국가와 의지대자본이 주체가 되어 하향식으로 전개된 관광위주의 개발은 도민들을 소외시킴으로써 비판의식을 고양했다. 도민들은 스스로 주체가 되고, 제주의 특성을 살리며, 환경친화적이고, 급하지 않게, 농업도 중시한 개발을 원한다(제주도, 1994: 18-3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여 과거 관행대로 개발을 시도했을 때 이에 대응하는 주민운동이 전개된 것은 필연적이었다. 88년부터 시작된 제주시 탑동매립반대운동은 제주도의 개발이 전개된 이래 본격적으로는 처음 전개된 주민운동이었다. 운동이 전개되는 동안 주민들이 얻었던 학습효과와 운동의 부분적 성공은, 그동안 개발에 무저항적이었던 도민들의 태도를 급변시켰다(조성윤, 1992). 곧이어 전개된 송악산군사기지 설치반대운동에서는 거도적으로 운동조직이 구성되고, 수천 명이 시위에 참가하였다. 전도민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함으로써 결국 기지설치는 철회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하수종말처리장·쓰레기매립장 등 혐오시설과, 화약고설치 등 위험시설에 대한 반대운동도 여기저기서 일어났다(이상철, 1995b: 92-108).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개발을 주도할 수 없어 전략을 변경하기에 이른다.

개발특별법은 중앙계획과 지방계획으로 이원화된 제주도의 개발계획을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을 명분으로 하고 있다. 90년 4월 노대통령이, 도민이 주체가 되고 도지사가 권한을 갖고 책임도 져서 개발의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지시하였다. 도지사의 건의를 대통령이 수용한 형태를 취함으로써 지방정부는 앞에 있고 중앙정부는 뒤에 있는, 개발전략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제정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90년 8월 시안이 공개되고부터 격렬한 찬반논쟁, 반대운동, 수정이 뒤따랐다. 도민들은 법제정 의도에 대한 의구심을 버리지 않았다. 91년 11월 양용찬씨의 분신 자살을 전후해서는 전국의 재야단체 및 야당까지 반대에 동참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12월 민자당 단독 국회에서 이른바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94년 12월에는 개정안이 의결되고, 95년 1월에 공포되었다. 특별법은 개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내용을 보면 개발을 '손쉽게' 하려는 것이 드러난다. 시안은 친자본적이고 반주민적인 요소가 많다. 그러나 수정을 거친 결정안에는 친자본적 요소가 줄어들고 주민을 위한 것도 많다. 결정안도 개발을 손쉽게 하자는 점에서는 시안과 다를 바 없지만, 도민의 비중은 대폭 증대되었다. 특별법에 의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입안은 92년 7월부터 시작되었다. 그후 시안은 공청회와 심의회 등을 거치면서 거도적인 논쟁을 야기하였다. 안은 수정을 거쳐 94년 5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⁵⁾ 특별법처럼 계획에도 주민을 위한 내용이 많다. 그러나 표방하는 것과 실천의지 사이에는 괴리가 커서 계획대로 시행될지는 의문이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개발전략의 변화는 개발방식의 변화에 그친다고도 볼 수 있다. 특별법을 제정하고 중앙정부가 전면에서 나서지 않는 것과, 지방정부와 주민에게 좀 더 큰 권한을 준 것 외에 개발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 이전의 계획들과 비교해서 관광중심의 개발, 외지 독점대자본의 중심적 역할 등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이상철, 1995b: 82-86).

V. 사회문화적 특성

이 장에서는 위와 같은 외생적 개발이 제주도의 사회문화적 측면에 미친

5) 특별법에 대한 체계적이고 자세한 분석은 부만근(1995)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향을 전통과 근대성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한국에서는 권위주의 정치 체제 하에서 개발이 급격히 이루어짐으로써, 서구 산업사회에서 근대적 합리성이 중심을 굳건히 형성한 것과는 달리, 전통적 요소가 현대 산업사회에서도 변용되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급속한 산업화·도시화와 계층이동은 사회 구성원들의 전통적인 공동체 연대기반을 와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체할 근대적 규범은 확립되지 못하여 구성원은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전통적인 연대원리가 변용된 연고주의가 만연하고 있다.⁶⁾ 나아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사고도 팽배한 상태이다. 연고주의는 지연·학연·혈연 등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역주의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이러한 '개인주의적 집단주의'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합리적 선택이고 순기능을 갖기도 하지만, 전체 사회 차원에서는 비합리적이고 역기능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극복의 대상이 된다.⁷⁾ 승리만

-
- 6) 자넬리 등은 인간행위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서구에서는 전통과 근대처럼 이분법적 관점에서 어느 한쪽을 강조·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본다. 관념주의 대 물질주의, 지역성 대 세계성, 전통 대 근대, 구조 대 행위의 관점이 그러한 지적 딜레마라는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이분법을 지양하고 동시에 위에 예시된 네 개의 개념도 상호 독립적으로 이해하기 보다 상호 연관된 개념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각각의 개념들, 특히 전통과 근대는 사람들이 처한 맥락 속에서, 의도적인 선택을 통해, 계속 재정의·재형성·재생산된다는 것이다.(Janelli와 임돈희, 1995: 175-189). 한국의 경우에도 전통적 요소가 근대적 요소로 대체되거나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상황에 변용되어 왔다고 파악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 7) 김선업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연줄망과 연고주의가 개인화된 연줄도 아니고 집단주의적 연줄도 아닌 '집단화된 개인적 연줄'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본다(1992: 28-29; 1993: 186-190). 개인화된 연줄은 개인의 의도나 동기에 따라 행위의 자율성을 최대한 지니는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것이다. 집단주의적 연줄은 집단의 규범과 통제에 순응하고, 집단의 유지와 개인의 생존을 동일시하는 관계망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집단화된 개인적 연줄은 개인주의적 성격이 약한 친족·출신지역·출신학교 등의 동질성을 기초로 형성되고 작용한다는 점에서 '집단적'이지만, 집단 전체의 이익보다는 구성원 개인의 이익과 목표가 우선시되는 경향이 강하고 집단준거에 대한 상대적 자율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이다. 이러한 집단화된 개인적 연줄에 기초한 사회적 유형을 '개인주의적 집단주의'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개인주의적 집단주의는 집단이 행위의 토대를 이룬다는 점에서 집단주의에 속하지만, 개인이 집단에 흡몰되기보다 집단을 이용 또는 동원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는 개인주의에 해당된다. 이것은 전통적 공동체 원리와는 다르고 산업사회에서 전통적 공동체가 붕괴된 것과는 상이한, 전통적 연대원리가 현대사회에 변용되어 활성화된 것이다.

하면 그 과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고는 공정성과 정당성에 대한 가치를 훼손시켜 근대사회의 민주적 가치체계를 확립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⁸⁾ 결국 전통과 근대적 가치의 이중적인 왜곡은 한국사회가 더 이상 발전하는데 걸림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인합리성과 사회합리성이 일치하는 사회구조로의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이러한 경향은 제주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제주의 경우도 개발에 의해 그 특수성이 약화되면서 한국사회의 일반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증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교육·대중매체·인구이동 등에 의해, 제주방언의 사용이 줄어들고 표준말 사용이 늘어나며 표준말에 제주방언이 통합되어 가는 경향은 일반성 증대의 좋은 예가 된다.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주방언은 표준말과의 격차가 다른 지역의 방언에 비해 훨씬 크다. 그래서 제주방언과 표준말의 사용을 전환할 때 얻는 사회적 의미의 전달효과가 더 크며 더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¹⁰⁾

이러한 일반성과 특수성의 관계는, 산업사회와 근대사회에 걸맞은 보편성과 합리성이 육지에 비해 제주가 더 부족한 점에서도 드러난다. 그것은 제주도의 자연적 조건과 개발의 성격이 전통사회의 사회문화적 제특성을 육지부에 비

-
- 8) 민주주의로의 이행과정에는 많은 장애가 존재한다.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되고 무조건 개인적으로 성공하겠다는 욕망 등이 강해지면서 사회통합과 공정성 등이 훼손되기 쉽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다양한 가치와 이해의 차이가 공정한 과정과 제도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어야 한다(Przeworski 외, 1995: 60-61). 권위주의적 체제 하에서의 급속한 개발은 이 점에서 민주적 가치체계를 우리사회에 확립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 9) 근대 민족 및 민족국가의 형성에 있어서 언어 통합이 중요하다는 것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홉스봄은 국가-또는 민족-가 언어-또는 국어-에 우선한다고 보고, 언어가 매우 중시된 것은 그것이 국가 또는 민족 형성에 있어서 갖는 효과와 통합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Hobsbawm, 1994: 68-171). 이런 점에 비추어서도 제주방언이 표준말에 동화되는 현상은 일반성 증대 또는 제주사회가 한국사회로 통합·종속되는 지표로 볼 수 있다.
 - 10) 표준말은 '육지'로 대표되는 남과의 상호작용에 쓰이는 공식적이나 남의 말이라는 뜻을, 제주방언은 '우리끼리' 쓰는 친근한 말이자 우리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제주방언에서 표준말로 전환하는 것은 사회적 거리의 확대, 상황의 공식적 재조정, 이성적·객관적 말 내용의 강조, 위장의 효과 등을 낳는다. 표준말에서 제주방언으로의 전환은 사회적 거리의 축소, 상황의 비공식화, 감정적·주관적 말 내용의 강조, 감정의 표현 등의 효과를 초래한다(강운희, 1994). 이와 같이 언어를 전환하는 것과 그 행위가 갖는 사회적 의미는 전국과 세계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국 내에서는 제주의 경우가 가장 효과가 크며 빈번하다.

해 더 많이 존속시켰기 때문이다. 산업화·도시화가 되어 중심을 이루고는 있지만, 제주도는 아직 농업사회와 산업사회의 측면이 섞여 있고 반농반도적이기도 하다. 좁고, 격리되고, 시련을 이겨온 사회이므로 아직 대면사회적(對面社會的) 측면, 전산업사회적 요소, 내외집단간에 적용되는 규범이 서로 다른 이중도덕(二重道德, dual morality) 등이 남아 있다(제주도, 1982: 836-842; 1993: 1209-1235). 아니 농업사회의 일차적 사회관계의 성격이 산업사회의 이차적 관계보다 우위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유철인, 1995: 75). '알음알음'으로 일을 처리하고, 관혼상제 때 특이한 부조행위를 하며, '신구간'이란 이사법이 존재하고, '제삿밥을 먹으러' 가며, 웬만한 사람을 '삼촌'이나 '조카'라 부르고, 각종 선거에서 무소속이 선호되는 것 등이 모두 이와 연관이 있다. 그 원인은 육지보다 강력했던 지역공동체의 전통, 외부가 주체가 되고 도민들은 소외된 개발, 다수의 도민들은 농업에 기반을 두고 외지대자본이 관광산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산업구조, 도시와 농촌간의 분화가 미진한 사회공간구조, 특히 엄청나게 빨랐던 산업화 속도 등에 있다. 즉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는 기제로서 전통적 요소들이 활용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형성되고 사회운동이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그 질적 성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외형상의 근대성에도 불구하고 각종 조직의 실질적인 운영은 민주적 절차·관행에 의하지 않고 일차적 사회관계에 의한 경우가 다반사이다. 좁은 대면사회이기 때문에 사회운동에서조차 일차적 관계가 민주적 토론이나 합리성에 우선하는 경우가 많다. 시민사회의 형식에 걸맞은 내용이 채워지지 않은 것은 전통적 공동체와 근대적 국가 사이에 매개물이 존재하지 않거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지역에 '원로'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인지 모르겠다.11)

11) 96년 5. 6월에 이루어진 조사에 의하면 도내에 사표가 될만한 원로가 없다는 의견이 78.4%에 이른다. 그 이유로서는 제주사람들이 인물을 키우는 데 인색하다고 보는 것(79.9%가 동의)과 연관되었다고 논하고 있다(김항원 외, 1996: 62-63). 물론 좁은 지역에서 어울려 살아오면서 형성된 제주사람들의 성격에 관한 논의는 제주를 설명하는 데 중요하다. 하지만 제주사회의 구조적 측면인 시민사회의 불완전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위의 조사에서도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거시적 사회변동에 원인이 있을 지 모른다는 언급은 하고 있다.

VI. 전망과 과제

제주도가 산업사회로 변모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적 갈등의 큰 축은 현재 ① 도내자본의 미형성에 따른 외지자본의 수요증가와 도민주체의 개발요구 사이, ② 소득증가를 위해 급속한 개발을 바라는 측과 그에 반대하여 보전을 바라는 주민 사이에 존재한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만약 개발지향의 성향과 그에 힘입은 정책이 큰 힘을 발휘하게 되면 산업사회·자본주의 원리의 확산 정도가 빨라지고 제주도의 변동도 커질 것이다. 이 변동에 지자체의 정착과 양대산업인 관광과 농업의 위상변화가 주요하게 맞물릴 것으로 보인다(김석준·이상철, 1996: 229). 특히 아직까지는 타격이 크지 않지만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은 감귤 등 농업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비교우위가 되는 요소들이 세계에서는 그렇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농촌과 제주도 내부에서 변화가 야기되는 큰 구조변동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특별법과 개발계획의 시행에 따라 개발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제주도에 한국사회와 세계체제의 영향이 더 강하게 작용할 것이고, 제주사회 특수성의 의미는—혹은 독자성은—상대적으로 비중이 약화될 것이다. 제주도민에게 있어서 육지는 제주와 분리된 외부집단이 아니라 제주가 소속된 더 큰 집단이 되고, 제주사회는 한국사회의 하위집단으로 통합되어 갈 것이다. 제주도에는 자연적 조건·내적 요인의 중요성이 감소하는 대신 사회적 조건·외적 요인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제주도 개발은 국가와 외지대자본이 주도함으로써 제주도가 한국사회의 주변사회화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 결과 도민의 비판은 커졌고, 80년대 말 이후 개발전략도 전환되었다. 특별법과 종합개발계획은 내세우는 것과는 달리 실제 내용에 반주민적인 요소가 많다. 하지만 친주민적인 것도 적지 않다.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도민이 주체가 되는 것이 쉽지는 않을 듯하지만 결론이

미리 내려진 것이라고 보아 포기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결론이 열려 있다고 보면 그 점은 더욱 그렇다. 쉽지는 않겠지만 도민들이 하기에 따라서 특별법과 개발계획은 도민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소지도 있다. 양면성이 있는 것이다. 더욱이 법과 계획이 이미 확정된 이상, 현실적으로 이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법·시행령·조례를 개정하여 개발을 좀더 쉽게 하려는 그후의 시도들에서도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감시·건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게임이 이미 끝났다고 포기할 경우 언제든지 법과 계획이 악용되거나 악화될 수 있는 것이다. 적극적 자세를 가지고 주민이 개발에 참여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지자체가 전면적으로 실시된 지금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개발과정에 참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개발정책에 대해 단순히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주도할 자발성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민주시민의 자세만이 개발을 외형 위주가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쪽으로 방향잡게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주민들도 지금까지의 타성에서 벗어나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과 행위를 제고해야 한다. 민주주의적 참여와 토론을 바탕으로 개발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며, 그 과정에 참여 의욕과 참여능력을 꾸준히 증대시킬 때 우리의 권리와 책임이 완수될 수 있을 것이다.¹²⁾

산업사회화가 더욱 진척되고 탈산업사회의 특징들도 단편적으로 나타나는 이제는 산업사회의 구성원리에 맞는 합리성과 보편성이 자리를 잡아야 할 때이다. 개인 및 내집단 차원의 합리성이 외집단을 포함한 전체 사회 차원에서도 합리적이 되어야만 앞으로의 사회변동에 적용할 수 있다. 공식적이고 합리적인 행위가 열위에 있고, 사적(私的) 영역이 공적 영역을 능가하고, 내집단만을 우대하는 풍토는 이제 시대에 맞지 않다. 하루빨리 근대적 합리성과 근대

12) '국가'와 '시장'의 논리를 넘어서 인간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은 자율적이고 자기성찰적인 주체의 형성이다. 민주사회에선 구성원들이 단순히 통치나 동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스스로 주인이 되어 능력을 배양하고, 사회적 과정에 참여하고, 대안을 이끌어야 한다(정수복, 1993: viii; 1994: 225). 제주도의 개발에 있어서도 이 점은 마찬가지이다.

적 규범을 제고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근대성이 가진 한계, 즉 사적인 개별 이익추구·시장원리·민족국가간 지배-종속의 한계 등도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한국사회와 마찬가지로 제주에서도 전근대·근대·탈근대의 '비동시성의 동시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근대성으로써 전통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에 근대의 단점이 노출되기 쉽고, 이 단점을 극복하는 과정은 때때로 복고적인 전통에 의존하게 되어 전통의 폐해가 장점과 함께 노정되기 쉽다. 전통과 근대의 장단점을 동시에 지양하는 것은 그 과제와 단점이 이중적(二重的)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지난하다. 우리의 과제가 쉽지 않은 만큼 더 많은 노력이 요청된다.

우선 전통사회적 요소 중 산업사회나 세계화 시대의 구성원리에 어긋나는 것들은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 외의 전통적 요소도 기계적으로 보존할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리의 변화에 한층 더 기능적이 되도록 재창조되어야 한다. 전통적 요소들이 순기능을 했던 사회구조가 바뀐 지금은 전통적 요소들은 재창조 대상이 되는 것이다. 예컨대 전통적 요소에서 근대성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연대와 공동체의 원리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통적인 귀속적 공동체의 배타성은 극복되어야만 한다. 전통적 배타성의 극복은 근대적 합리성과 보편성 및 자발성의 원리로 일차 달성할 수 있다. 이처럼 전통의 장점인 연대와 공동체, 근대의 장점인 보편성과 자발성의 원리가 결합되는 과정 속에서 연대가 내집단에 한정되지 않은 미래지향적인 자발적 공동체가 가능하고,¹³⁾ 제주는 그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제주도의 강한 지역공동체의 특성이 승화되어 전통과 근대의 한계를 동시에 극복하는 대안이 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비공식적이고 사적이며 배타적인 사회관계의 망이 공적이며 보편적 원리를 추구하는 행위 주체가 됨으로써, 민주사회의 주체 전환과

13) 리프킨은 대두하고 있는 미래에 '노동의 종말'을 예상하고, '시장'과 '국가'를 넘어선 자발적 결사인 '제3부문' 또는 '시민사회'의 역할 증대에 기대를 걸고 있다(Rifkin, 1996: 326-375). 그런 점에서 미래지향적인 자발적 공동체는 과거 및 현재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의 문제까지 동시에 극복하는, 즉 전근대·근대·탈근대를 함께 지양하는 방안이 되는 셈이다.

주체 확장이 가능해진다.¹⁴⁾ 그럴 때 앞으로 관광산업-국민관광이든 국제관광이든지 간에-이 더욱 발전하고 외부와의 접촉이 증대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아니 그래야만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개발의 참된 주체뿐만 아니라 세계의 주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세계무역기구의 출범, 세계화 추세 의 진전도 이런 태도를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요컨대 제주도는 전통 농업사회의 자기완결적 구조에서 개발로 인해 단기 간에 한국사회의 주변사회로, 그리고 세계화 추세 속에서 세계체제와 직접 관계를 맺게 되는 변화를 겪고 있다. 이제 우리는 전통적 연대를 지양하여 사회 전반에 합리성을 제고하고, 민주시민으로서 개발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세계시민으로서의 보편성과 개방성을 갖추어야 한다. 생각은 '세계적'으로 하고, 행동은 '지역적'으로 해야 한다.¹⁵⁾ 그 경우에만 제주도의 주변적 성격을 극복하여, 육지와는 상호보완적이고 평등한 관계로 전환하고 세계질서의 급변 에도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곧 제주도가 보편성 속의 특수성으로,

-
- 14) V장에서 논한 개인주의적 집단주의가 성행하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공적인 문제를 공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사적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지배적임을 반영한다. 이러한 사적이고 비공식적인 연대가 사회 전체 차원에서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사적인 이익추구를 지양하여 공적인 관심과 행동을 보여 공익을 추구하여야 한다. 그럴 때의 연대는 이해관계만에 기초한 근대적 연대보다 훨씬 강하며 그만큼 효과도 클 것이다. 사적인 미시적 과정이 공적인 거시적 과정과 이어지는 '미시적 동원맥락'(micro-mobilization context)의 원리가 활용될 때 '제3부문'이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국가'와 '시장'과 구분되는, 자발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연대에 입각하되 공익을 추구하는 제3부문은 우리의 다양한 연대와 모임이 사익추구나 친목도모에 그치지 않고 공적 활동의 장으로 전환될 때 크게 활성화될 것이다(정수복, 1996: 118-125). 그것이 곧 주체 전환과 주체 확장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사회 발전의 중요한 길이며, 전근대·근대·탈근대를 동시에 지양하는 방법이다.
- 15)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전근대성-지역에의 매몰-과 근대성-자본주의적 경쟁과 지배-종속 관계-의 한계를 동시에 넘어서는 것이다. 월러스틴은 "지역 차원의 행동이 우리가 [현재: 필자] 이 위기로부터 벗어날지를 결정하는 주요변수"이며, "안으로가 아니라 바깥으로 향하는 지역적 연대를 조직하고 부활시켜야 한다. ... 다른 집단을 회생한 대가로 자기 집단을 보호하는 행위가 자기파멸적인 것"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Wallerstein, 1996: 99). 즉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지역의 구체성에 기반하되 그것이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세계적 보편성을 가져야하는 것으로 근대적 국가의 한계를 초월하는 의미이다. 지역을 바탕으로 움직이면서도 국가의 울타리를 넘어 국제적인 연대망의 결성이 추구되어야 한다. 즉 공동체와 연대의 경험이 내집단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전체에 확대될 때, 전통과 근대의 한계가 동시에 극복될 수 있다.

특수성 속에 보편성의 구체화로 변증법적 통일을 이루며 한 단계 발전하는 길이다. 이를 위한 노력은 학계, 대중매체, 정부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운동이 함께 할 때 더 큰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윤희, “제주사회에서의 두 방언 사용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 제주도연구회, 『제주도 연구』 제11집, 1994.
- 김석준·이상철, “제주지역사회의 변동과 사회조사의 전개,” 한림대 사회조사연구소 편, 『한국사회학평론』 3, 한울, 1996.
- 김선업, “한국사회 연줄망의 구조적 특성,”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제26집, 1992.
- , “연줄망과 연고주의,” 임희섭·박길성 공편, 『오늘의 한국사회』, 나남, 1993.
- 김항원·김진영·강근형·고성준, “제주인의 의식과 제주정신의 정립,” 제주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 1996.
- 부만근, 『제주도 개발특별법의 제정과정 연구—제주도민의 제정반대운동을 중심으로』, 온누리, 1995.
- 신행철, “제주사회의 기본적 성격,” 신행철 외 지음, 『제주사회론』, 한울, 1995.
- 유철인, “제주문화의 연속과 변화와 재창조,” 제주도연구회 제11차 전국학술대회 발표문, 1995.
- 이창기, “제주도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환경: 도전·적용·초월의 메커니즘,” 신행철 외 지음, 『제주사회론』, 한울, 1995(1992).
- 이상철, “제주사회변동론 서설: 개발정책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신행철 외 지음, 『제주사회론』, 한울, 1995a(1987).
- , “제주도 개발정책과 도민 태도의 변화,” 제주도연구회, 『제주도연구』 제12집, 1995b.

- 정수복 편역, 『새로운 사회운동과 참여민주주의』, 문학과지성사, 1993.
- , “새로운 사회운동의 이론과 현실”, 『의미세계와 사회운동』, 민영사, 1994.
- , “한국인의 모임과 미시적 동원맥락,” 『경제와사회』 제29호, 한울, 1996.
- 제주도, 『제주도지』 상, 1982.
- , 『제주도지』 제2권, 1993.
- ,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1994.
- 조선일보, 1995. 11. 24.
- 조성윤, “개발과 지역 주민 운동: 제주도 탐동 개발 반대 운동을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 56, 1992.
- Janelli, Roger와 임돈희, “한국 한 재벌회사의 인간관계에 대한 문화적 이해와 관행연구,” 『한국문화인류학』 제28집, 1995.
- Hobsbawm, Eric, *Nation and Nationalism since 1780*, 강명세 옮김,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창작과비평사, 1994.
- Lauer, Robert, *Perspectives on Social Change*, 정근식·김해식 옮김, 『사회변동의 이론과 전망』, 한울, 1985.
- Przeworski, Adam 외, *Sustainable Democra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 Rifkin, Jeremy, *The End of Work—The Decline of the Global Labor Force and the Dawn of the Post-Market Era*, 이영호 옮김, 『노동의 종말』, 민음사, 1996.
- Wallerstein, Immanuel, *After Liberism*, 강문구 옮김, 『자유주의 이후』, 당대, 1996.